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정부 출범 이후 종합청렴도 4년 연속 상승...올해는 종합청렴도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 수준
 - 내년부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해 반부패 노력·성과까지 종합 평가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

(2021. 12. 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오전 정부서 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12개)

국민권익위는 내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까지 청렴도로 종합평가 하기로 했다.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 최근 5년간 청렴도 점수 추이(2016년~2021년) >



올해 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 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청렴도 측정 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 내부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 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반영해,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현황과 기관장·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성 비위 사건도 부패사건과 같이 청렴도에서 감점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 자체감사 등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 결과를 추가 반영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2020년~2021년)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8.54점)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 자치단체(8.03점)가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년에 이어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개선 추세다.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변화 추이(2020년~2021년)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평가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조사한 체감도와 기관별 부패사건 데이터에 대한 부패실태뿐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와 성과 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로 개편된다.

종합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 등급으로 발표된다.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합하되,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 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보다 유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 록 측정·평가 모형과 지표를 마련했다.

*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등을 반영하여 구성된 평가지표에 대한 공공기관의 1년간 의 반부패 노력·실적을 정량·정성 평가하는 평가제도로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 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음

종합평가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현재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공공기관은 270여개 정도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매년 500여개 기관 이상을 평가할 계획이다. 기존 기관의 규모(정원) 중심이던 평가 대상기관 유형 분류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분류한다.

구체적인 평가모형과 평가 지표, 결과·등급 산정방식도 그간의 각급 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통합 평가체계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상의 청렴수준을 설문방식으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의 평가항목을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기관의 반부패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평가는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까지반영한다.

아울러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부패실태 평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청렴도에 반영 되는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했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 로 제작되었다.

또,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기관 누리 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중 '22년도 종합평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해 대상기관, 평가지표별 가중치·배점 등 세부 평가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일선에서 보다 적극 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정부

(2021. 12. 29., 국민권익위)

<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반부패·공정개혁 완수로 청렴선진국 도약
- ◈ 든든한 국민편 "권익해결사"로서 국민고충과 사회갈등 적극 해결
- ◈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 추진, 국민생각함 활성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선도

I. 지난 4년 반 추진성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다.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 * 「공공재정환수법」제정·시행('20.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시행('22.5 예정), 부패신고 피신고자 대상 사실확인 기능 강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1.7.)
 -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신고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17년, 279개 → '21년, 471개)하고, 신고자를 적극 보호·보상하였다.
 -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CPI)가 4년 연속 대폭 상승해 '20년에는 역대 최고점수(61점)로 세계 33위를 기록하고,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PI)는 '20년 114개국 중 18위를 기록했다.

< 국가청렴도(CPI) > **61점** 59점 57점 54점 2017 2018 2019 2020



- □ 국민·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정책도 추진하였다.
 - 위법·부당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해결하여 23,810건의 국민권익 침해사안을 구제하였다.
 - *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해결 11,666건, 행정심판 인용 12,144건('17~'21.11.)
 - 아울러 범정부 정책 소통·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261건**의 공정·포용 분야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Ⅱ.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ㅇ 국민권익위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 청렴선진국에 걸맞는 반부패·청렴정책 혁신 >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제도운영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여 각급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 신고시스템과 운영체계 등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22)'에 이은 「(가칭)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 과제들을 발굴하여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 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 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 * '종합청렴도' 측정 : 청렴체감도(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 + 청렴노력도(반부패 추진체계 구축노력·운영실적·효과성) (-)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현황)
-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 사회 전 부문의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확산 〉

-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시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렴 리더십 과정 등 특화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청렴교육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및 실적을 기관 홈페 이지 등에 공개토록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부패인식도조사 시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화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는 한편,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공기업 등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율실천을 적극 지원하고, 청렴연수원에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 공기업에 대한 교육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 채용비리 근절대책도 지속 추진해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1,66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5차 정기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 정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 〉

- 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2.2.18 시행)으로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부패신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 지자체·공공기관의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부패가 빈발 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 (예시) 특혜성 수의계약 등 지방계약 분야, 공정채용기준 준수여부, 지방선거 이후 부정청탁에 따른 예산지원 선정 및 인사부정 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점검 강화 등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 에서의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관별·법령별·세부사업별로 공공재정지급금 대비 **부정수급액을** 분석·공개하여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를 집중점검하고 개선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강화 〉

○ 법률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 o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 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 또한 비실명대리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대리 범위를 조사·수사· 재판 및 보호·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고충 해소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경영활동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지역형·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확대 운영하여 찾아가는 국민고층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한 고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대응반'을 투입하여 고충 상담 및 즉각적인 지원을 위한 해결 체계를 가동한다.
- 장기화된 갈등 사안과, 다수기관이 관련된 사안, 추정 소요예산이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집단민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사회적 현안 집단민원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 사회적 현안 집단민원 조정·해결 프로세스 >

- 집단민원을 더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 또한,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관과의 수용협력회의, 보고·언론공표 등 단계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관별 수용현황에 대한 **언론공표를 확대**하여 특별한 사유없는 불수용을 최소화하고 **불수용 사안**에 대해 **권고내용과 미이행사유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 효율적·전문적 고충민원 처리체계 확립 〉

- 날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 전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세미나 개최 및 사전컨설팅 제공 등을 확대한다.
-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시민고충처리위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 하는 표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아울러,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권익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침해받은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수사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군 내부의 인권·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입대에서 제대까지 군복무 전기간에 걸쳐 안심하고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관 지정·운영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국방음부즈만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다.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강화 〉

- o 행정심판 사건 처리 시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 침해도 적극 판단하고, 변경재결 및 조정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을 높인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증거 조사와 구술심리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시도행심위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및 '유형별 맞춤 재결례' 등을 제공하여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 욕설·비방 등으로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보정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 시 무답변 재결이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3. 국민의 목소리 기반 정책·제도개선

〈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범정부 디지털 소통플랫폼 운영 >

○ 범정부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대해 온라인 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접수·처리 및 민원데이터 관리·분석·활용 근거와 국민 권익위의 총괄 운영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한 「국민신문고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신문고 관리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문고 미사용
 공공기관과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이용기관을 확대한다.
- 대표적인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정현안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한 여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국민패널' 제도를 활성화하고 조사결과의 활용도 확대해나간다.
- 보다 촘촘한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활성화** 하고,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국한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소극행정 업무행태를 유형화하고,
 소극행정 빈발사례, 처리기준 및 절차, 해결·개선 모범사례 등을 내용으로 소극행정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 국민의 소리에 기반한 정책·제도개선 적극 추진 〉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민원 빅데이터 기획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 민원분석 주제(예시) > * 최근 3년간 민원('19.1.~'21.10.)

분 야	분석 주제
단계적	▶ 지역 관광·여행 관련 불편사항(128,000여건)
일상회복	▶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문화공연 이용 관련 불편(11,500여건)
포용국가 및	▶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의 양육비, 주거지원 등 관련(172,000여건)
국민안전	▶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검사 등 식품안전 관련(24,000여건)
불공정	▶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등(11,000여건)
관행·부조리	▶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관련 사례(30,000여건)

- 빅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융합·협업을 통해 민원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확대한다.
- 아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부패위험요인과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구조적·고질적인 부패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분 야	개선과제 (예시)
사회변화 선제적 대응	-부동산 신탁 관련 불공정 계약 방지, 공동주택 비리 방지 등
	-스마트공장 사업 폐쇄적 운영방식 개선,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비리 방지
민생회복 및 사회안정망	-단체표준 합의제도 보완, 분쟁해결 심의강화 등 기업불편 요소 개선
	-장애인·고령자 무인단말기 사용 편의제고, 교복구입비 지원제도 개선
	기부·후원 명목의 각종 수수행위 개선, 공공기관 보유 리조트 등 부적절 사용 개선
	-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및 기준 개선,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지정기준 마련 등

〈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한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해결 >

- 국민이 만족하는 민원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예년의 상담 추이 등을 분석하여 각종 세금납부시기 및 정부보조금·수당 지급 시기, 국민생활 밀접 법률 시행시기 등 계기별로 집중 상담기간을 설정하고 상담원 교육을 강화한다.
- 다수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상담협의회를 적극활용하여 조정을 활성화하고, 특히,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원실 협조를 통해 민원상담협의회 상정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한다.
-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자동상담을 도입함으로써, 24시간×365일 중단 없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22년은 그간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고층과 사회갈등의 적극 해결로 든든한 국민 편 '권익해결사'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9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14일 한국대표로 화상회의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완화, 반부패 정책 시민참여 중요성" 기조연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UNCAC 당사국총회에 화상으로 기조연설 참여

(2021. 12. 15.,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3일 오후(한국시간 14일 오전) 이집트에서 열린 제9차 유엔반부패협약(UNCAC) 당사국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완화와 반부패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중요성"에 대해 기조연설 했다.

UNCAC 당사국총회는 2006년 첫 번째 총회 개최 이후 격년으로 개최 되며 부패예방 및 척결을 위한 노력과 국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왔다.

< 유엔반부패협약 개요 >

-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당사국 188개국
- (제정 목적)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 향상
- (협약 서명) '03.12.10., (협약 발효) '05.12.14., (국회비준동의) '08.2.29.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UNCAC 국회 비준동의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제9차 당사국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및 비대면 회의로 병행해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수석대표로서 화상으로 참석해 '한 국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과 향후 반부패 정책 방향'에 대해 연설했다. 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완화와 반부패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까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부패 예방, 부패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자산 회복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긴급 위기 대응, 회복 기간 동안 부패 예방 및 척결 국제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샤름 엘 셰이크 선언 문'*을 비롯한 다수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제9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지인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의 지명을 딴 선언문으로, 개최국인 이집트가 주도하고 레바논, 팔레스타인, UAE가 후원,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17일 채택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 지법' 등을 통해 전통적 부패와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반부패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향후 부패문제 해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과 미래 청렴정책 방향 제시

7일 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 주최 온라인 국제 학술회의 연사로 초청

(2021. 12. 8., 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7일 오후 8시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PACC, Palestinian Anti-Corruption Commission)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청렴 가치 구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공공부분 부패예방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탈리아 및 요르단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OECD, UNESCO, UNDP 등 주요 국제기구의 반부패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전 세계 부패 예방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연설은 반부패 및 투명성 분야에서 모범적인 한국의 경험과 비결을 국제사회에 공유해 달라는 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이루어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연설에서 한국은 부패의 사후 적발·처벌에서 나아가 효과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렴도 측정제도'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각 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성과가 있었고,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부분을 넘어 민간부분의 공익침해행위를 억제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연고·온정주의에 기인한 부정청탁 관행과 금품수수를 근절해 왔고, 2022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앞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에서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사회 전반의 경제적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시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부패예방 정책은 반부패를 넘어선 '청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개혁 경험과 성과가 각국의 부패예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반부패를 위해 정책 교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TI)와 손잡고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정책 선도

20일 국민권익위원장과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정책간담회 개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키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TI 다니엘 에릭슨 회장과 화상회의 진행

(2021. 12. 2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20일 오후 6 시부터 6시 50분까지(독일 기준 오전 10시)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인 다 니엘 에릭슨(Daniel Eriksson)과 기관장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TI와 진행한 실무협의의 후속조치이다.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 체(93년 설립)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9일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서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라고 밝힌 만큼 반부패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국제적 소통· 협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은 국제 사회의 지원과 협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이제 한국도 국제적 반부패 정책 운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차원에서 국민권익위는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과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다 많은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인력을 교류하고, 한국의 반부패 정보를 정기적으로 TI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TI 회장인 다니엘 에릭슨은 "TI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패 방지와 민주주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보여 준 한국의 성과와 경험은 TI의 반부패 운동의 대표적인모범 사례(Best Practice)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와 TI의 협력은 세계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개도국 전파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국민권익위-UNDP 업무양해각서(MOU) 2년간 재연장

(2021. 12. 3.,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반부패정책의 개발도상국 공유를 위해 '15년 12월 유엔개발계획(UNDP)과 최초 체결한 업무양해각서를 '23년 12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서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안네 유프너(Anne Juepner)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대행과 국민권익위 -UNDP 간 반부패협력 MOU 연장 및 향후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이 지난 6년간 함께해 온 반부패정책 개도 국 공유사업이 ▲국민권익위는 한국에서 성과가 입증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UNDP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 개도국에 전달함으로써 양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한 협력모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분야로 한국의 디지털 활용 반부패 정책 노하우 공 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도국도 현재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발 맞춰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와 UNDP 서울정책센터는 그동안 협력 사업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해 여러 나라에 전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새로운 협력사업 분야로 국민권익위의 반부패디지털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선정한 것은 기존의 성공적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내년부터 동 시스템의 개도국 전수사업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청렴포털'(www.clean.go.kr)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이다. 국민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청렴포털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상담및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다. 디지털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이기에비실명·대리 신고가 가능하고 철저한 신고자 보호가 보장된다는 장점이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MOU 연장으로 앞으로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디지털 플랫폼인 청렴포털이 개도국의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베트남과 부패 척결 위한 협력 강화하기로

1일 반부패 협력회의 개최, 양국 반부패 정책성과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국민권익위,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영상회의 개최

(2021. 12. 1., 국민권익위)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오후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위원장 판 딘 짝, 이하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양국의 반부패 정책 노력 및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베트남의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해 10월 이를 연장해 상호 간의 부패방지 정책성과 및 발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지속적인 반부패 제도적 기반 마련과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는 부패공익신고시스템 '청렴포털*' 등 한국의 반부패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시스템

한편, 베트남에서는 보 반 중(Vo Van Dung) 중앙내무위 부위원장 등 중앙내무위와 감찰원 관계자 2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해 2020년 베트남 반부패 전략 및 UN 반부패협약 이행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양국의 반부패 정책 노력 및 성과를 공유하고 반부패 정책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에서 전 세계와 한국 반부패정책 성과 공유

17(금), 반부패 정책 등 논의 위해 반부패 회의 개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문재인 대통령 환영사

(2021. 12. 17.,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열린정부 파트너십 글로벌서밋' 행사의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반부패 분과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전 세계와 공유했다.

< 반부패 분과회의 운영 계획 >

- 1차 (12.17.금 10:30~11:50) '한국의 반부패정책 성과와 교훈' 세션
- 2차 (12.17.금 13:00~14:20)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청 렴정책 구현'세션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1대 OGP 의장국으로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1 OGP 글로벌서밋'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오전 '한국의 반부패정책 성과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반부패 분과회의를 운영했다.

반부패를 국정기조로 설정한 현 정부는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이해충돌방지법」및「공공재정환수법」제정,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등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오후에는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구현'을 주제로, 시민사회·경제계·언론·학계 등 사회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운영 성과 등 반부패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반부패' 분야 전체회의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부패 대응체계와 정부·민간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번 글로벌서밋에서 모아진 생각과 지혜가 전 세계에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2021 OGP 글로벌서밋'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되었고, OGP 공식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OGP 공식 홈페이지 (http://ogpsummit.org)
OGP Korea 2021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에서 'OGP코리아' 검색)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변호사를 통한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신고자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2021. 12. 13.,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 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또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 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 임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확대했다.

*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

또한,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당시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허용 범위를 설·추석 명절에 한해 두 배까지 허용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보호·지원이 더욱 강화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시행령 등 후속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신고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